

국무총리행정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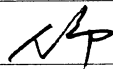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8 / 전송 (02)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67060 -

시행일자 1997. 12.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총괄심의관 	
심의관			
과장			
기안	이정원		협조

제목 :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철저(국무총리지시 제1997- 호)

1. '97. 8. 20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립공원·행락지등 쓰레기 투기근절 종합대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를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기관·단체등에서 실천해야할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시달하니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01~가17, 가20~가33, 가40~49, 가51~가54, 나01~06, 나10~나18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쓰레기 處理 綜合對策

'97. 12

關係部處合同

(環境部, 內務部, 農林部, 海洋水産部)

< 目 次 >

I. 基 本 方 向

II. 推 進 計 劃 內 容

III. 推 進 體 系

IV. 細 部 實 踐 計 劃

1. 세부 실천과제 목록

2.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I. 基本方向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생활환경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절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버려진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처리하며 나아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
- 정부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체계적 분담에 의한 시책추진과 함께 시민단체, 언론등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
- 제도의 개선, 단속등 행정력 동원, 범국민적 교육·홍보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자연환경보전, 자원절약과 질서의식 함양
⇒ **우리공동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가꾸고 보전하는 「국토 사랑운동」**으로 승화

II. 推進計劃 內容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체계 정비 (총리훈령제정)
 - 공원·도로·산림등 취약지역을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쓰레기관리 체계 구축
 - 명절, 피서철, 행락철등을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 자치단체, 경찰 및 해당 운영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 쓰레기 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을 증원('97년 441명→'98년 1,873명)하고, 하천감시·산림감시·공원녹지감시등 7개 분야의 환경 관련 공익근무용원(1만2천명)에게 쓰레기 투기감시를 병행토록 하는 통합활용체계 구축
- 야영·취사행위에 대한 단속실시
 - 무분별한 야영·취사가 근절될때까지 자치단체등 책임단속 기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
 - 야영·취사 허용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취사시설, 쓰레기 보관시설등 기반시설 정비
- 국립공원내 관리개선
 - 등산로, 식물군락지역등 13개 공원 36개소에서 실시중인 '자연 휴식년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 수용가능한 적정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출입사전예약제' 도입 검토
- 행락지 관리기관에 대한 쓰레기 관리실태 평가
 - 관리기관의 적기수거등 관리실태, 종량제 이행실태, 단속실적등을 종합평가
 - 우수기관 표창, 사업비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쓰레기 수거대책

-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원 및 장비 최대한 동원·지원
-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특별관리
 - 야산지대, 폐허지역등 청결취약지역 1,708개소 573천평에 대해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상수원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별 청소차량, 청소선, 감시선등 수거장비를 확충하여 부유쓰레기 제거대책 추진
- 새마을 대청소 활성화
 -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인식제고를 통한 쾌적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발전
- 농촌 쓰레기 저감대책 추진
 - 농협을 통한 농약빈병 수거체계 정착
 - 썩는 비닐의 확대보급으로 폐비닐 발생저감 추진
- 바다쓰레기 적극관리
 - 소량의 쓰레기 투기자에 과태료부과 신설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추진
 -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 도서지역 소각장 설치범위 확대 및 폐유처리장 시설 설치

□ 쓰레기 감량화

- 음식물쓰레기 관련대책
 - 음식물쓰레기 의무화 감량대상업소가 '97. 7월 600여개소에서 '98년 1만 6천여개소로 확대(객석면적 100m²이상과 1일급식 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의 감량화조치 의무화)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적극 강구
 - 2001년까지 일선 시·군·구에 235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4,627억원) 확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품질인증제도(K마크)」를 활용하여 우수감량기기를 공급확대하고, 유통되고 있는 처리기기에 대한 점검으로 불량제품에 대한 조치강구
- 시·군·구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처와 수요처를 연계강화
 - '97년 상반기 2,858건 43,062톤 알선
 - 퇴비·사료화 업체에 장기저리 육성자금 지원('98년 100억원)
-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1회용품 감축대책
 - 리필(Refill)제품의 공급이용 활성화
 -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용기 사용규제 강화방안 검토
- 재활용제품 사용활성화 및 쓰레기 종량제의 보완·발전
 - 재활용 비축시설 설치확대, 재활용기술 개발
 -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확대

□ 범국민적 참여유도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지원·활용
 - 시민감시활동,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쓰레기발생 실태조사등 사업에 대한 적극지원
- 종교계·학계·시민대표로 「국토사랑협의회」를 구성하여 「국토사랑운동」추진
 - 3대실천운동 (국토청결운동, 자연사랑운동, 녹색문화운동)
- 「새마을 대청소의 날」을 정례화하여 새마을 대청소를 활성화
 - 매월 1일, 15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례화
 - 새마을 조직별 경진대회 등 개최로 참여 활성화
 - 대대적인 홍보로 범국민적인 참여유도

Ⅲ. 推進體系

☐ 기본정책 방향 결정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 개최
 - 내무 · 법무 · 환경 · 농림 · 해양수산부등 참여

☐ 세부추진계획 협의 · 조정

- 총리실에 「쓰레기관리 실무대책반」 편성 · 운영
 - 내무 · 법무 · 환경 · 농림 · 해양수산부등 참여

☐ 대책추진 점검 · 평가

- 총리실 주관, 연2회 정기평가 실시
- 각부처 합동 또는 자체점검 · 평가 수시 실시

☐ 범국민적 참여유도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를 통한 국민운동 추진
- 민간단체 · 언론등에 대한 협조 · 지원, 공동사업 시행등 공조체제 유지

Ⅳ. 細部實踐 計劃

1. 세부 실천과제 목록 (총 61개 과제)

분 야	세부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쓰레기 투기단속	1-1. 쓰레기 특별관리 대상지역 지정	총리실, 환경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시·도
	1-2. 쓰레기 특별관리기간 설정	총리실, 환경부	시·도, 경찰청
	1-3. 환경관련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	시·도	환경부, 병무청
	1-4.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1-5. 야영·취사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1-6. 야영·취사 허용지역의 합리적 조정 및 기반시설 정비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시·도
	1-7. 행락지등에서의 쓰레기종량제 철저 이행	환경부	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1-8. 국립공원 출입 사전예약제 도입 추진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1-9.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확대실시	내무부, 산림청	시·도
	1-10. 행락지 관리기관에 대한 쓰레기 관리실태 평가	총리실	내무부, 환경부
	1-11. 쓰레기투기 빈발 도로지역 집중관리	시·도, 한국도로공사	
2. 쓰레기 수거 대책	2-1.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 추진	내무부	각부처, 시·도
	2-2. 새마을대청소 활성화	내무부	시·도
	2-3. 상수원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분 야	세부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2-4.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해소	내무부	시·도
	2-5. 농촌쓰레기 일제수거기간 설정·운영	농림부	시·도, 한국자원재생공사
	2-6. 농협·판매상을 통한 농약빈병 수거	농림부, 농협 중앙회	시·도
	2-7. 폐영농자재 발생량 저감 대책추진	농림부	시·도
	2-8. 폐농기계 수거체계 구축	농림부	시·도
	2-9. 김장쓰레기 관리대책	시·도	환경부, 농림부
	2-10. 바다쓰레기 투기예방	해양수산부	시·도
	2-11. 방치폐선 및 폐유처리	해양수산부	시·도
	2-12. 어장 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해양수산부	시·도
	2-13. 바다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	해양수산부	시·도
	3-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환경부	시·도
	3-2. 주택·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자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	시·도
	3-3. 공동주택 건설시 재활용 또는 자원화시설 설치	환경부	시·도
	3-4.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환경부	시·도
	3-5. 결혼식에서의 지난친 음식제공억제	보건복지부	시·도
	3-6. 농수산물의 쓰레기유발 부담금 제 확대 실시	농림부	시·도
	3-7. 음식물쓰레기 및 1차발효부산물 의 공급체계 확립	시·도	환경부, 농협중앙회
	3-8.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수요처 연계를 위한 재활용 창구 개설	환경부	시·도
	3-9.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재활용하 는 방안 강구	시·도	환경부
	3-10.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공정규격 개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분 야	세부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4.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1회용품 감축 대책	3-1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생산· 제조업체 육성지원	환경부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시·도
	3-12. 좋은 식단체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3-13. 모범음식점지정 확대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3-14.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설치	국방부	
	3-15. 감량화기기 품질인증 확대 및 관리강화	환경부	생산기술연구원
	3-16.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 관리 강화	시·도	환경부
	3-17.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연구· 개발 촉진	환경부	시·도, 관련전문 연구기관
	3-18. 남은음식 재이용 운동 전개	환경부	보건복지부
	4-1. 리필제품의 공급·이용 활성화	환경부	통상산업부
	4-2. PET병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색깔 및 재질규제 강화	환경부	통상산업부
	4-3. 페유리병의 색깔별 분리촉진	환경부	시·도, 한국자원재생공사
	4-4. 포장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 책무 강화	환경부	통상산업부
	4-5. 장바구니 사용 적극 권장	환경부	
	4-6.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량 목표를 상향 조정	환경부	통상산업부
	4-7. 과대포장 단속 강화	시·도	환경부
	4-8. 합성수지재질 라면용기의 사용규제 강화	환경부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분 야	세부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5.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	5-1.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확대	환경부	시·도
	5-2.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환경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5-3. 재활용 비축시설 설치확대 및 재활용기술개발	환경부	조달청
6. 쓰레기종량제 보완·발전	6-1.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	시·도	환경부
	6-2. 사업장쓰레기 종량제 시행 확대	시·도	환경부
	6-3.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시·도	환경부
	6-4.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강화	환경부	시·도
7. 범국민적 참여유도	7-1.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	공보처	환경부
	7-2. 환경교육 강화	교육부, 환경부	
	7-3. 국토사랑운동 전개	환경부	
	7-4.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운동협의회」 지원활용	환경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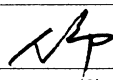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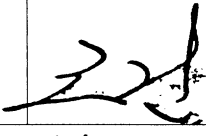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8 / 전송 (02)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67060 -

시행일자 1997. 12.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심의관		총괄심의관	
과장			
기안	이정원		협조

제목 :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철저(국무총리지시 제1997-18호)

1. '97. 8. 20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립공원·행락지등 쓰레기 투기근절 종합대책」을 결정하고,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를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기관·단체등에서 실천해야할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시달하니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01~가17, 가20~가33, 가40~49, 가51~가54, 나01~06, 나10~나18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